

미국, 태양광 발전 지원 “팍팍”

캘리포니아, 시스템 운영비용 50% 환급 ... 인센티브 비율 확대

미국이 재정난을 겪는 와중에도 차세대 청정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와 인센티브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태양광 발전 시장은 주정부는 물론 지자체나 공공 전력기업들이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각종 지원에 나서면서 2004년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일반 가정과 기업은 물론 공공 도로표지판과 소규모 수중 펌프 등에 적용되는 태양광 발전량도 증가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공공에너지 위원회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가정과 기업 등에 시스템 운영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캘리포니아의 전력기업 애너하임은 주거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W당 5달러, 상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에 4.5달러를 환급하고 있다.

버뱅크와 팰러앨토 등은 산업용과 상업용, 주거용, 공공사업용, 학교 등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요처별로 환급금을 지원하고 있고 해마다 인센티브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레딩 등 일부 에너지기업은 태양광 프로젝트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환급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최근 각 지역 전력기업들이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태양광 발전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마다 예산을 늘려 주기로 했다.

태양광 설비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자 미국 유수의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설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은 세계 각지의 공장에 수백개의 태양광 시설을 도입했으며 도요타(Toyota)도 최근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시설을 건설했다.

KOTRA 미키 조 연구원은 “태양광 설비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 분야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고 있어 주목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25>